

## 2019년 제3회 기록관 혁신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국가기록관리 혁신 및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추진과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제3회 기록관 혁신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 일시 및 장소

- 일시: '19. 11. 26.(화) 15:00~17:00
- 장소: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회의실

### □ 참석 인원: 간사위원 등 9명

- 전문위원(5)
  - 곽건홍(간사, 한남대 기록관리학과 교수), 김잔성(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남경호(국가보훈처), 이철환(금융정보분석원), 최동운(한국국제협력단)
- 원내배석(4)
  - 김형국(연구협력과장), 이영도(혁신팀장), 서은영, 권성현

### □ 회의 안건

- 국가기록관리 혁신과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검토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추진과제(안) 의견수렴

### □ 진행 순서

시 간	회 의 내 용	비 고
15:00~15:05	인사 및 개회	
15:05~15:40	안건 발표	
15:40~16:50	토론	
16:50~17:00	폐회 및 마무리	

## 제3회 기록관 혁신 전문위원회 회의록

- 회 의 명: 2019년 제3회 기록관 혁신 전문위원회 회의
- 개최부서: 연구협력과
- 개최일시: 2019. 11. 26.(화) 15:00 ~ 17:00
- 개최장소: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회의실
- 참석위원: 객건홍, 김진성, 남경호, 이철환, 최동운
- 배 석 자: 김형국 연구협력과장 등 4명
- 안 건: - 국가기록관리 혁신과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검토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추진과제(안) 의견수렴

### 【안건 설명】 국가기록관리혁신과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검토 (발표자: 김진성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단에서 처음으로 안건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합의되는 부분 위주로 작성했으며, 안건 설명 후 위원별로 보충 발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방향 및 주요 분기점을 첨부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록물법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된 상태이며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안이 수립 예정이라는 것 입니다. 2017년 상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 현재까지 혁신이 추진되었고 현재 원장님 임기 기준으로 보아도 약 2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기록물법을 개정 정도인데, 그 내용의 범위나 세부사항은 ‘혁신’이라고 지칭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중장기 발전전략은 그보다 나아가야 합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우선 현재 추진 중인 혁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의 구성과 원칙이 이뤄낸 성과는 소중하고 작지 않으나 그 틀 내에서 개선하는 수준을 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998년, 2005년 이상의 혁신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른 문제는 비(非)공공 영역(private sector) 기록관리 혁신 방안이 부재하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비(非)공공 영역(private sector)을 기업, 시민사회단체, 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정적 측면에서 보자면, 전체적인 미래상 및 추진방법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고, 혁신 관련 자문위 등 기록공동체, 개인 단위 참여활동이 형해화된 점, 그리고 개별 기록물관리기관의 적극적 참여·유도 방법이 부재하다는 것 입니다. 2017년 연말에 연찬회나 현재 진행 중인 정책포럼 등이 있기는 했으나 그런 형식으로 계속 진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자문위원회 등 형식의 한계도 고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기록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며 기록공동체에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의 중점은 공공기록관리체계 수립 20년간의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기록물관리 업무를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고, 기록물관리기관의 변화는 부수적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결을 내리자면 별첨 자료와 같은 기록물 관리 관련 법규 전반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록물 관리 3단계 구성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3단계 관리제도는 수천 개의 공공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기록관리체계가 운영되는 기반을 마련했으나 개별 모기관의 다양한 규모, 성격, 정보화 환경, 모기관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량 이관 및 선별 보존 정책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 보존기간의 종류를 단순화 하되 조건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5단계로 세분화하든지, 단계 구분없이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하게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기록시스템 역시 이런 차별화된 정책에 적합하도록 분화되어야 할 것 입니다.

기록콘텐츠 제작 및 전시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전제로 하는 보존정책 모색이나 비밀, 접근권한 관리와의 관계 재정립과 같은, 유관 분야의 중앙기관들과의 협의라는, 개별 기록물관리기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공기록물법률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수천 개에 달하는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단독으로 이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에 중간기관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립해가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대대적인 권한 분할, 국가기록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립, 개별 기록관 중 일정조건에 적합한 기관에게 권한 분할 등 다양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록원만의, 기록공동체만의 혁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 일반과 기록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증진하며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건 설명】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추진과제(안) (발표자: 이영도 팀장)**

※ 안건 자료 참조

### **【전문위원회 토론】**

**남경호 위원)**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중장기발전전략수립기획단의 1차~6차 간담회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의를 거듭할수록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틀은 현행 기록관리 체계(생산·RM·AM)에 매몰되어 있으며, 현재 실무에서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막연하게 나열한 듯한 느낌입니다. 추진과제는 생산·AM까지의 유기적·구체적·일관성을 갖춰야 하나 현상황에 대한 검증 불가능한 대안이 제시된 듯한 느낌입니다. '20년~'24년이라는 5년간 추진하는 계획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출발점으로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혁신의 마무리가 법률 개정이라는 느낌이 강한데, 현재 기록원 각 부서별로 추진중인 혁신과제의 경우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기록원 내의 업무추진의 성과로 보이며, 이것이 현장에 전파되어 즉시 기록관리 실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록관'을 설정하고 기록관리 3단계 체계를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공공기록법 제정 이후 자료관-기록관의 존재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기록관리전문요원'의 문제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체계에서 기록관은 기록이 처리과에서 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가는 시·공간적 간격을 메꿔주는 역할이 중심입니다. 종이기록 중심의 과거에는 처리과와 영구기록관리기관의 간격을 메꿔주는 것이 의미가 있었으나, 전자기록 중심의 현재는 처리과-영구기록관리기관의 간격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위한 근거로서 기록관을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며, 기록관리 업무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구상하면서 기록관리기관, 인력 등에서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생산통제를 기록관(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게 일임하면 안됩니다. 기록 생산의 책임은 당연히 생산자의 몫이며, 기록관리전문요원은 필요하면 생산플랫폼에 관여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쉽게 포착·획득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엉망으로 생산된 기록을 수동적으로 이관받아서 ‘폐기되었다’는 면죄부를 주거나, 기록의 재포장(공개재분류, 정리, 포맷변환 등)을 힘겹게하여 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역할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최동운 위원)** 그간 국가기록관리 혁신이 국가기록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고, 세부 이행과제까지 구체적으로 도출된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혁신의 요구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원점에서부터 복기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기록관리 혁신의 시대적 요구는 무엇이었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까지 올라간 맥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록관리계의 노력과 합의는 무엇이었던지, 그리고 그간 노정했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그 문제점은 어디에서 비롯하고 있는지, 또 혁신 과제의 경중은 어떻게 선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무엇인지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그려온 결락 부분은 채우고, 방향이 틀렸다면 다시 재설계하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정부혁신의 성과는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기록관리의 혁신 역시도 공공기관의 내적 관리 영역에서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그간 국가기록관리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에 국정과제가 되었는지, 공공영역의 기록관리 혁신이 달성되면, 즉 기록관리가 잘되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록관리 혁신은 국민 입장에서 고민해야 하고 잘 커뮤니케이션될 때, 기록관리는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논의의 주체는 대부분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기록관리전문가들이었고 주된 담론 구성 역시 각자 실무적인 입장에서 다루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앞서 언급한 근본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금회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기록관리 중장기발전전략 초안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세부추진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대한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제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로드맵과 액션플랜, 그리고 자원 확보의 후속조치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철환 위원)** 지금 혁신안을 마련하는 데 국가기록관리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나 업무생산단계를 관리하는 부서와의 협의가 중요하고, 기록관 단위에서도 업무관리시스템이나 행정업무 부서와 협의하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혁신의 범위는 공공기록물관리법 혹은 국가기록원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을 생산하고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법, 인력 단위가 무엇인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향후 전자정부법 등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록관혁신전문위로 회의 중이지만 기록관 중심이 아니고 기록관리 업무혁신 중심으로 얘기되어야 합니다. 1인 기록관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많이 해왔으나, 이를 테면, 3인이 있으면 해결이 가능할지 생각했는데, 기록관의 근본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처리과 기록물관리 책임자의 등급조정, 교육 강화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처리과에서 생산하게 하고 보존하게 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록관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서 우리가 기록관리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국민서비스로 이어져야 하는 아카이브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록관리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비(非)공공영역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록관리 관련 문화적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사안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가진 민간영역 기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전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관리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기록원이 외부연구자들에게 용역을 줘서 연구하는 방식을 쓰는데, 밀접하게 결합하여 기록관리 정책을 내놓고 연구성과를 추진하는 센터 등의 방식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전수진 위원** (일신상 사정 때문에 위원장 대독) 기록관 혁신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국가기록관리 혁신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최근 2년여간 논의되는 기록관리 혁신이 방향성과 지향 보다는 현재 법령 테두리 내에서의 개선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우선 '공공 기록물'의 범주를 벗어나야 기록관리 혁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5년 개정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록관리가 여전히 '혁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록관리가 기존의 문서관리와는 다른 효용성과 전문성을 가진다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넘어서는 효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역할 설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록관리 체계나 업무 절차 등에 대한 논의와 재설정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개별 기록관리기관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가능한 방향이었으면 하며, 법령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자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논의의 결과로 법령 제·개정과 같은 제도화 방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것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현장의 의견을 1~2회 수렴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용 방안이 충분히 검토된 후 시행되도록 추진 단계를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거의 혼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해 오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입장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법에 정해진 업무를 하기에다 벽차고, 안팎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나 수행하는 업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왔는데, 무언가 또 바뀌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거나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업무를 또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리면 힘이 빠집니다. 혁신안이 몇 년까지 모든 기관에 적용되도록 의무화되기보다는, 다양한 지원과 사례 공유를 통해 충분히 공감한 후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곽건홍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에 공감합니다. 기록관리기관(기록관 중심)보다는 기록관리 업무 중심으로 논의해 봅시다. 별첨의 관련 법령들의 경우 개별 기관에 있으면 이런 법령들이 기록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혁신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기록을 중심에 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록원이 만들고 있는 중장기 발전전략도 법률개정 말고는 아웃풋이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하고나면 기록이 잘 남을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중장기발전전략 내용에 있어서, '너무 망라한게 아닌가' 합니다.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 과제를 나열하는 전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기록원,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모두 국가기록관리와 관련이 있지만

그들을 강화하는 것에는 국가기록원의 위상,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배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과제로서 설정하기보다 실효적인 지원 자체가 필요합니다. 현재 중장기 발전전략의 과제에는 실무적인 부분이 꽤 많습니다. 모멘텀 같은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정부안에서 무엇을 하겠다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기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잘 안되는 곳이 작은 기관과 권력기관입니다. 권력 기관부터 기록관리 혁신을 잘하면 다른 기관들에도 부수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비(非)공공영역에 대한 발전전략 과제를 보면 주로 수집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공동체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구조적인 대안을 고민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형국 연구협력과 과장)** 추진과제가 150개 정도이며, 기록 관리 혁신과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에는 혁신의 목표를 정하고 추진과제들을 도출하는 방식이었으나, 혁신되어야 하는 모든 과제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향후에는 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지난 20년간 유지해 온 기록관리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기록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록과 기록관리업무를 놓고 봐야하고 거기에 맞춰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기록관체제를 바꿔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1인 기록관만 해결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새로운 환경에 맞춰 기록관리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야할 것인가, 그에 맞는 기록관리체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카이브는 기관의 기록관리를 지원하고,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서비스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동안 기록을 어떻게 서비스할지는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중장기 전략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며, 향후 내부논의와 의견수렴을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함. 무엇보다 기록관 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을 정하고, 그에 맞는 기록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환 위원)** 중장기발전전략(안)외에 혁신 과제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마다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배부한 것에서 끝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번 중장기 과제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실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국가기록원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향점을 갖고, 비판이 있더라도 방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안 좋은 방법은 결론이 안 난다고 설문조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많은 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형국 연구협력과 과장)**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혁신과제 대부분 종결되었으나 법 개정엔 치우쳐있습니다. 법 개정은 혁신의 수단이며, 집행이 더 중요함. 향후 혁신업무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일을 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김진성 위원)** 법률 개정보다 국가기록원 운영방침 변화만으로 가능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굳이 과제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형국 연구협력과 과장)** 과제는 조정이 필요하며, 의견을 주시면 선별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2년간 혁신이 추진되면서 혁신에 대한 일반국민 대상의 보도자료가 거의 만나왔습니다. 추진과제안과 구분되어서 조금 더 단순화 된, 설명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국민들 대상, 정치권 대상이라든지, 기재부 설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김형국 연구협력과 과장)** 지난 20년간 기록 관리를 통한 정부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록관리 비전에는 기록관리 혁신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기록관리가 잘되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철환 위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 미치는 중요한 기록물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위기대응이나 외환위기에 관련된 행정 기록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남겨야 하는데,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기록관리 과제를 설명할 때 거꾸로 그 기록을 남기기위해서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동운 위원)** 공공서비스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도 중요하고, 우리끼리 세부적인 부분을 설계하기 위한 작업도 필요합니다.

**김진성 위원)** 이번 혁신에 대한 비전·미션이 별도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지난 6월 국가기록원에서 공표한 것은 국가기록관리의 비전·미션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아야 하는데, 이번 혁신 자체는 10년, 100년 동안 추진할 것이 아니기에 이에 적합한 비전·미션이 필요하며, 그 워딩을 기준으로 일반국민이나 정치권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동운 위원)** 현재 중장기 발전전략안은 어느 시기까지 설정한 것입니까?

**김형국 연구협력과 과장)** 5년 계획이며,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단기와 중기 과제로 구분할 예정입니다.

**김진성 위원)** 약간 다른 애긴데, 예전에 어느 교수님께서 왜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5년 단위 종합 계획을 수립하지 않느냐? 라는 의문을 던지셨습니다.

**김형국 연구협력과 과장)**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중장기 전략을 5년 단위로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곽건홍 위원장)** 국가기록원 내부적으로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연구소가 필요합니다.

**김형국 연구협력과 과장)**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기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인사 운영을 통해 정책 연구기능을 맡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합니다.

**김진성 위원)** 국가기록관리 혁신이기에, 전략적인 측면에서라도, 비(非)공공영역 부분을 중장기 발전전략(안)에서 타이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국 연구협력과 과장)** 단기적으로는 민간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 지원체계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기록관리기본법의 제정 검토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향후 법 제정을 통해 민간부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환 위원)** 이번에 기록인대회에서 발표되었는데, 정보공개센터에서 IMF사태 관련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공공기록관리와 별개로 우리 사회에 기록을 보존하고 원가를 하려는 의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곽건홍 위원장)**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중에 우리가 가장 뒤떨어져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전공 하고 있는 전문적인 우리 분야가 외부의 앞선 논의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트 아카이브 분야나 KBS 모던코리아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에서 선진화된 기법으로 전시도 하고, 기록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면 서비스가 개선된다가 아니라,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남경호 위원)** 오래된 기록물에 대한 서비스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최근 이슈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오래된 기록물을 찾아들어가는 접근을 주로 합니다. 수십 년 전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기록물을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지금 현재에 대한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성 위원)** 지원의 방법은 조금 더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기록관리 분야 외에도 공공 영역에서 비(非)공공 영역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하고 있으나, 대부분 만족스러워 하는 단체나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 일방적인 호혜는 비현실적이며 조심스럽게 다양한 지원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남경호 위원)** 기록을 직접 수집해서 직접 서비스 하는게 아니라, 이슈가 됐을 때 ‘국가기록원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나중에 이관할 예정이다’라고 선전해서 기록관리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성 위원)** 그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이용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곽건홍 위원장)** 제3회 기록관 혁신 전문위원회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제3회 기록관 혁신 전문위원회 회의 모습

